

한미 FTA 반대: 근거와 전망

장상환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진보정치연구소장)
changsh@gnu.ac.kr

정부는 지난 2월 2일 한미 FTA 협상 추진을 개시하고 내년 6월말까지 협상을 타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6월 5-9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1차 협상을 하고 돌아왔다. 정부는 한·미 FTA와 이를 통한 전면 개방이 대미 수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의 증대,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 등을 통해 국민 소득과 후생의 증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우리 경제시스템을 선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정부의 이러한 주장을 믿을 수 없고, 한·미 FTA에 찬성할 수 없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한미 FTA 반대의 이유

첫째,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는 과정이 너무나 졸속적이었다. 대외 경제협력에 대한 참여정부의 애초 입장은 한일 FTA, 한중 FTA를 통해 동북아 인근국가와의 통상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유럽 연합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과 유사한 지역경제협력체제였던 셈이다. 그런데 한·미 FTA를 이렇게 앞당겨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한국의 경우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으므로,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강한 경쟁력을 가진 미국 서비스산업자본을 끌어 들여 경쟁을 격화시킴으로써 한국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키운 후 중국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2월9일 공개된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한·미 경제관계: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력, 마찰, 전망’)는 동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미국의 이익을 저해하며 높아지고 있는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에 대응

하는데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2월3일 양국의 협상 개시 환영성명에서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아시아 개입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부상에 놀란 한미 양국이 갑자기 전략적 동맹 수준을 높이려고 했고, 그 일환으로 한미 FTA가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미 FTA는 미국이 한국 서비스 시장을 요리하고 또한 한국에 교두보를 마련하여 중국시장을 진출할 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WTO/DD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다자주의적 무역질서의 형성이 지체되면서 FTA와 같은 지역주의로 이를 돌파하려는 것이다.

중국의 부상에 놀란 한미 양국이 갑자기 전략적 동맹 수준을 높이려고 했고, 그 일환으로 한미 FTA가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미 FTA는 미국이 한국 서비스 시장을 요리하고 또한 한국에 교두보를 마련하여 중국시장을 진출할 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갑자기 추진한다고 보니까 여러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제대로 된 연구를 할 겨를이 없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인문사회연구회의 업무 조정에 따라 FTA 관련 연구를 아예 진행하지도 못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FTA관련 연구를 독점시켰는데 연구결과에 대해 비판이 가해지니까 정부는 허둥대기만 했다. 향후 한국 경제의 장래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중대한 협상을 이렇게 충분한 준비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무모한 도박으로서 대단히 위험하다.

둘째, 한미 FTA를 통한 개방이 경쟁력을 높이

고 선진적 구조개혁을 앞당긴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박약하다. 정부는 대외 개방이 초래할 수 있는 경제의 변덕성과 양극화 심화 등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한미 FTA의 전제조건으로 우리 자신의 내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개혁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한미 FTA와 같은 외부압력을 통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순환논법이다. 오히려 내부 구조개혁과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개방하는 것은 경제의 변덕성을 높이고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한미 FTA로 개방을 하기만 하면 한국 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는 길도 열린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오히려 1990년대의 선부른 개방과 1996년 OECD 가입에 따른 무역자유화와 자본자유화가 경제 불안을 가중시켜 결국 외환위기를 초래했고,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개방을 더욱 확대한 결과 양극화가 심화된 사실을 근거로 볼 때 준비되지 않은 개방은 경제 불안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내주고 부도 위험이 높은 어음을 받는 것'과 같이 불안한 것이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개방을 더욱 확대한 결과 양극화가 심화된 사실을 근거로 볼 때 준비되지 않은 개방은 경제 불안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내주고 부도 위험이 높은 어음을 받는 것'과 같이 불안한 것이다.

실제로 1994년에 미국, 캐나다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은 멕시코의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멕시코는 1994년 1,400억 달러이던 멕시코의 무역규모는 2003년 3,363억 달러로 2.5배가량 증가하였고, 1994년 이래 총 1,40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도 유치했다. 그러나 멕시코의 경제가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낮은 성장과 경제 불안에

처했다. 미국경제의 변동에 취약한 구조가 되어 2002년에는 2000년 말부터 시작된 미국 불황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제로로 내려갔고, 실업률은 9.7%에서 15.1%로 증가했으며,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60% 증가한 반면 실질임금은 한때 1994년의 80%까지 떨어지는 등 임금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국경지역과 여타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의 사례를 볼 때, 거대 경제권과 FTA체결이 경제성장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비민주적 통상협상절차를 그대로 두고 협상을 진행할 경우 미국에 대해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10여일의 예고를 통해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이는 법에 근거한 국민적 의견 수렴의 취지가 아닌 '자유무역협정체결 절차규정'(대통령훈령)에 따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셋째, 정부가 주장하는 한미 FTA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는 무리하고 비현실적인 가정에 입각한 추정치로서 과장이 심하다. 한미 FTA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와 관련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06년 1월에는 실질 GDP 성장률이 수년 내에 2% 높아지고 고용이 1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다가 2006년 3월에는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성이 1% 상승한다는 가정을 추가하여 실질 GDP 상승률이 10여년간 7.75%(연간 0.7% 정도) 상승하고, 고용도 10년 동안 55만 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CGE(일반균형연산모델)에 의한 계량분석은 국가 내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롭고, 완전한 생산요소의 이동이 발생하며, 그 이동을 위한 비용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즉 자유무역으로 인해 비교열위 산업이 퇴화하면서 발생하는 유향 자본, 노동, 토지 등의 생산요소가 비교우위 산업으로 비용 없이 자유롭게 완전히 이동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따라 계량분석이 실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 경제는 국가 내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모든

생산요소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생산요소의 이동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특히 FTA 등 통상조약체결로 인해 산업구조조정의 폭이 넓거나 그 속도가 빠른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사회경제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넷째, 정부가 주장하는 산업별 효과도 아전인수식으로 과장되어 있다. 한미 FTA의 산업별 효과에 대해서 정부는 농업 분야는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 증가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지만, 취약한 서비스분야는 시장개방 확대를 계기로 경쟁 격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제조업 분야는 대미 수출 확대를 통해 성장을 제고 및 고용 확대 등 유리한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분야의 경우 미국의 수입관세율이 2.5%로 이미 낮으며, 섬유류의 경우 섬유사 원산지 규정(Yarn Forward)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있어서 대미 수출 확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입관세율이 8%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경우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대하여 대미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위험성이 높고 특히 자동차 산업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서비스 산업의 경우는 경쟁력이 아직 취약한 사실을 감안할 때 국내 보호 육성 전략과 경쟁 정책을 충분히 시행하지 않은 가운데 쇼크 요법식으로 개방을 앞당기는 것은 한국 서비스업의 쇠퇴를 가져올 것이다. 전문 서비스업의 특성상 대량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한미 FTA로 한국의 서비스시장을 미국 자본에게 내주고 한국의 자본이 일본이나 중국 상해 금융시장을 주도하거나 한국 금융시장에서 중국과 일본의 유흥금융자본을 운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허망한 기대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농업분야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고, 농촌사회의 붕괴로 대량 실업 사태가 일어나고 고용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다. 농업고용은 71천명-14만3천명이 감소하고 한·미 FTA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계층은 40대 이하의 경영규모가 상대적

으로 크고, 농가소득 수준이 높은 농가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비민주적 통상협상절차를 그대로 두고 협상을 진행할 경우 미국에 대해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10여일의 예고를 통해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이는 법에 근거한 국민적 의견 수렴의 취지가 아닌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에 따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당연히 이해관계자들은 반발했고 공청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버린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 초안과 제 1차 본 협상 결과 등 한미 FTA 협상의 진행과 관련된 제반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미 FTA에 따르는 피해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에 국회에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제한을 두고 있으며 지원 내용도 보잘것없어 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한국의 대응

한미 FTA는 전세계의 다양한 FTA중에서도 매우 특수한 미국식 FTA이다. 상품 무역 협정을 넘어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등 거의 모든 통상사항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역주의가 아니라 다자주의로 대응해야 한다. 한·미 FTA를 중단하고 WTO/DDA를 통하여 개도국과 연대하면서 한국이 처한 식량대량수입국과 개도국으로서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대외통상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제도를 미국식 기준에 뜯어 맞추는 전면적인 경제통합 협정이다. 국민들이 번 것을 모조리 소비해버려서 국내 저축이 거의 제로이고, 이 때문에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미국식 자본주의 시스템은 세계 기축통화를 공

급하는 미국의 특수한 지위를 기반으로만 지탱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역주의가 아니라 다자주의로 대응해야 한다. 한·미 FTA를 중단하고 WTO/DDA를 통하여 개도국과 연대하면서 한국이 처한 식량 대량수입국과 개도국으로서의 특

수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대외통상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하루속히 국회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보장하는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고, 충분한 피해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방향으로 '무역조정지원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세종연구소 신간안내

한국의 국가전략 2020: 정치·사회

박기덕 편

한국은 1987년 이후 상당한 정치·사회적 발전을 이룩하여 국제사회에서 성공사례로 인정을 받고 있으나 아직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립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15년 동안 우리의 국내 정세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들을 규명, 앞으로의 전개될 상황을 예측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정치사회질서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서는 2020년 한국이 '선진평화강국'의 지위와 남북간 공존공영의 관계를 확립했다는 전제 아래, 정치제도, 정당과 시민사회, 사회적 갈등의 평화적 관리, 교육 및 인적자원, 복지 그리고 문화라는 여섯 가지 분야에서 성취해야 할 각각의 목표와 비전을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국가전략 2020 : 대북·통일

정성장 편

1989년 동구 사회주의 체제들이 연이어 붕괴되면서 북한도 곧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이 국내와 국제사회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북한이 비록 경제적으로는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심각했던 식량난에서 벗어난 상태로 파악된다. 현재 다수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체제의 내구력을 대체로 높이 평가하여 앞으로의 장기간 존속을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2020년경까지 북한체제가 존속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여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에서 2단계로 설정된 남북연합을 어떻게 실현하며, 또한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평화체제 구축 등을 어떻게 달성하고 통일외교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국가전략 2020 : 동북아 경제협력

김성철 편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동북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증대하고 있다. 현재 동북아 지역은 세계 교역량의 약 3분의 1, 세계 국민총생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 책은 지역으로서의 동북아는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러시아, 북한, ASEAN을 포함하고 미국도 고려하는 입장을 취했다. 동북아 경제협력은 기능적 경제통합으로 나아가는 분야별 경제협력을 의미한다. 경제협력은 경제교류를 통한 국가간 협력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지역 내 정치 외교적 및 사회문화적 교류와 군사안보협력의 선행단계로 볼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동북아 국가간 FTA, IT협력 등 동북아에서 지역협력의 가능성을 살피고 한국의 역할과 전략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국가전략 2020: 동북아 안보협력

이태환 편

이 책의 목적은 2020년의 동북아 지역의 안보 상황을 전망하며 한국이 취해야 할 동북아 지역안보 전략을 제시해 보는 데 있다. 이 책의 1부에서는 동북아 안보 상황의 분석을 미국, 중국, 일본의 시각으로 나누어 지역의 역학 구도와 주요 강대국들 간의 관계를 조망해 보고 있다. 제 2부에서는 지역안보협력을 위한 전략으로 소다자협력체제인 삼각협력체제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2020년 동북아지역의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의 요체는 강대국들과 전방위적으로 양자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함과 더불어 이지역의 안보기제에서 어떻게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는가이다. 이 책이 상정한 2020년의 안보환경은 현재의 양자간 동맹 체제를 중심으로 한 세력균형 구도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채 지역 내 갈등과 경쟁 그리고 협력이 혼재한 상황이다. 지역 통합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다자 안보협력체제가 어느 정도의 형태를 갖춰나가는 것이다.